

해고자는 노동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해복투(위원장 윤유식)는 7월 2일 하동화력 을 시작으로 7월28일까지 30개 지부 현장순회 를 완료하였다. 8월초 휴가집중으로 인한 현장 분위기와 교통체증 등으로, 나머지 지부에 대 한 순회를 8월 10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순회에서 해복투는 공기업선진화와 구조 조정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주문하 고 있다.

해고자들은 투쟁의 시기에는 선봉대가 되기 도 했고, 일상시기엔 집행부의 조력자이거나 비판자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상급 단체나 기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통해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각자의 영역에

서 활동하던 해고자들이 잠시 일상을 접고 다 시금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결코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자는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 대해 얼마 나 잔혹한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해고자는 노동자 의 희망이며 자랑이다. 해고자는 노동자의 마 지막 자존심이며, 해고자 복직은 노동자의 자 존심을 지키는 요구이다. 그래서 해고자 전원 복직의 그날까지 발전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멈 출 수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밀려나 적제는 몇년에서 많게는 십 수년을 싸우고 있는 해고자 동지들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다. 현장에서 해복투 동지들을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건네자!



이호동 (울산화력 해고자)



전승욱 (여수화력 해고자)



윤유식 (울산화력 해고자)



박주석 (울산화력 해고자)



조준성 (삼천포화력 해고자)



김동성 (태안화력 해고자)

♣ 낚말 맞추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정답을 작성하여 이메일(baljeon@baljeon.nodong.net)로 보내주시면, 선택 순 5명의 동지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림파일, 한글파일, 엑셀파일 가능) 정답은 다음호에 공지됩니다.

가로 열쇠

1. 노동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평가결과와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 연봉액이 삭감될 경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노동자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위화감 조성, 불안감 증대 등의 문제점이 있음
3.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 보이는 짙은 색의 동심원이나 타원모양. 이를 통해 나무의 나이를 산정하기도 하며, 간격으로 방향을 기능하기도 함
5. 에스카모인의 얼음집
6. 남부 아시아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지로 지배다 1948년 영국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함. 최근 타밀반군의 항복으로 27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이후 타밀족에 대한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음

세로 열쇠

2.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4. 경찰 대테러장비. 총알 끝이 낚시바늘처럼 생겨 전기감 발생충이라고도 하며, 사정거리 7m에 순간전류 5만 볼트가 흐르며, 최근 생용자동차 노동자 박아무씨가 경찰이 쏜 이 총에 맞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제시민위원회는 테이저건 사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무려 150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 테이저건으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통계를 밝히면서 즉각 사용중지를 주장한 바 있음
7. 운전석이 분리되어 있는 세단형 고급 승용차 또는 공방의 여객을 나르는 소형버스
8. 이집트의 수도
10. 두 개 이상의 불룩 렌즈를 맞추어서 멀리 있는 물체 따위를 크게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장치
12.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1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9. 기억장애의 하나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
11. 같이 죽음으로써 끝장을 낸다는 의미로 '물귀신 작전'이라고도 함
13. 줄여서 가볍게 함. [법률]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14.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
17.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했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19. 중요하고 큼
22. 일을 자주 툴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23. 파업 전술의 하나. 노동조합이 작업장 중요한 특정 부서의 조합원을 지명하여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전면 스트라이크와 같은 효과를 노림

-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권의 시녀가 되어 공기업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에까지 초범(탈범)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15. 2004년 10월 생용차 지분 48.9%를 5천 900억원에 인수후 약속했던 연구개발 투자를 일체 하지 않은채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기반기술과 설계도만 빼 감. 올해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자동차업체
16. 기업이나 직종, 숙련이나 비숙련의 구별 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 의하여 조직된 노조
18. 비타인도의 결판으로 빼에 갈증이 불기 어려워 뼈의 변형인병다리 등이나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병
19.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
20. 팔 벌의 소설 제목. 빈둥으로 재산을 모아 대자주가 되는 왕릉과 그 일가의 역사를 그린 작품
21.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등 세계 축구경기를 주관함

2009년 8월 12일

제6호

발행인 박노균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 B/D 5층 TEL 3456-8156 FAX 3456-8159 http://baljeon.nodong.net



존경하는 7천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집중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 정원감축 및 임금삭감 이사회지시투쟁, 발전회사별 구조조정에 대한 산발적 투쟁으로 중앙쟁대위 기간도 그 만큼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감사원을 통해 단체협약 무시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성과경쟁을 위해 조합원을 경쟁시키고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회사는 경영진의 실적을 위해 발전회사별 소사장제, 책임경영제, ERP 도입 등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 책임을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발전회사 경영진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조합원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쟁취와 정원감축 철회, 임금삭감 원상회복, 부속인원 신규충원, 해고자복직 등을 걸고 하반기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투쟁은 이명박 정권을 향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감축과 대졸초임 삭감이사회에서 보았듯이 사측은 정부의 폭두카시에 불과하며, 부속인원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을까? 우리만 투쟁에 앞서다가 오히려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 가?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자랑스러운 투쟁의 경험이 있으며,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도 받아들이 수도 없는 7천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많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투쟁을 준비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분노를 갖고 자신감으로 승리를 만들어 갑시다!

자신감은 승리의 밑천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넘어 현장에 들어오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는 7천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파열구를 만들어 냅시다. 발전노조 7천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만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후퇴시키고 발전회사별 진행되는 무한 경쟁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쟁대위가 조합원 앞에 당당히 다시 한 번 나서겠습니다. 함께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균

쟁의대책위원회

더 큰 단결, 더 큰 연대로 하반기 투쟁 승리하자



지난 7월 20일 진행된 제1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부분 변경안을 논의 결정하였다. 이날 쟁대위 결의에 따라 애초 8월 중순에 예정되었던 권역별 발전소 1박2일 투쟁이 9월 11일(금)~12일(토)로 변경되었고, 8월 말 예정되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월 17일(목)~18일(금)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쟁대위는 지난 8월 6일 권역별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변경된 하반기 투쟁을 공유하고, 이후 힘찬 투쟁을 결의하였다.

현재 각 발전현장은 ERP, 예측정비, 개인평가, TDR 등 다양한 구조조

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고, 이에 맞선 본부별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투쟁이 한 본부만의 투쟁이 아니고 전체 발전노동자의 투쟁이다. 발전노동자의 하반기 투쟁은 각 본부별 진행되는 구조조정투쟁을 중앙쟁대위를 중심으로 5개본부가 공동 대응하고, 투쟁을 통하여 현장조직력을 더욱 강화해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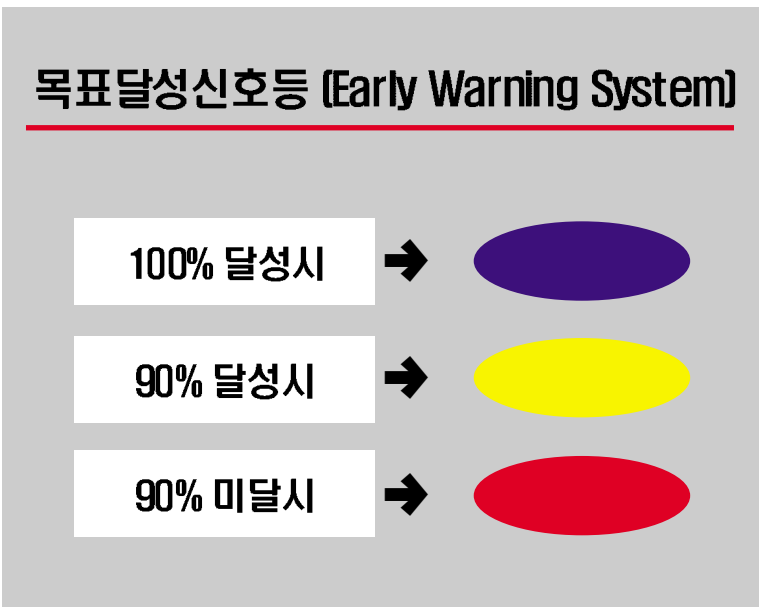
또한 발전현장에 도입되는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은 철도와 가스산업에도 그대로 도입되고 있다. 지난 대표교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구조

- ▶ 08.10(월)~21(금) 권역별 현장순회
- ▶ 08.11(화) 발전/철도/가스 공동투쟁을 위한 투쟁선포식 및 결의대회
- ▶ 08.27(목)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 ▶ 08.24(수)~09.04(금) 중앙집행부 현장간담회 (위수사 1조, 5개본부장 1조)
- ▶ 09.02(수) 준법투쟁 및 지부 상황실 설치
- ▶ 09.11(금) 권역별 발전소 1박2일 노숙투쟁
- ▶ 09.17(목)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9/18까지)
- ▶ 09.26(토) 조합원 총력결의대회

로 그 어떠한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발전노조는 운수노조 철도지부 및 공공노조 가스지부와 함께 두 차례의 합동 수련회를 진행하며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8월 11일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을 위한 투쟁선포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하반기 투쟁에 대한 수정은 더 큰 단결로 현장에 들어오는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며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더 큰 연대로 정부의 선진화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퇴직 시스템 ERP, 7천 발전노동자가 함께 싸운다



▲ 경희의료원에 설치된 ERP 목표달성 신호등. 실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실적이 저조하면 빨간불과 함께 성과급을 삭감한다.

올해 들어 한전은 ERP가 미구축된 남부, 남동, 서부발전을 묶어 통합 ERP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RP는 자재관리나 생산성 향상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ERP가 고도화되면서 많은 공기업에서 팀별평가 및 개인평가 등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도입된 ERP는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최종적으로 개별평가를 통한 노동자의 일상적 퇴출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ERP는 업무실적, BSC, 교육평가 등 모든 것을 계량화하여 개인별 평가를 하고

부서별 전체 순위와 개인별 순위를 매긴다. ERP가 도입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개인평가를 통해 인사와 임금을 차등하고, 더 나아가 일상적인 퇴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발전노조 남부, 남동, 서부본부는 올해 초 ERP 도입 저지를 위한 공투본을 구성하고 본관 단식농성 등 ERP 저지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경우 ERP시스템에 인사, 노무관리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동서발전의 경우 ERP 도입 이후 로그시트 폐지, 개인평

가 등 ERP를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ERP투쟁은 ERP가 도입되고 있는 세 개 본부만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과 5개 본부가 공동으로 “ERP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응팀”을 구성하였다. 공동대응팀은 이후 ERP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교육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업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ERP는 전체 발전노동자가 함께 움직이고 싸울때 도입을 저지할 수 있다. 이제 7천 발전노동자가 하나되어 조기 퇴직 시스템으로 작동할 ERP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자!

“사오정, 오륙도”의 시작은 연봉제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십에서 오십 사이가 정년퇴직, 오십육세까지 회사에 있으면 도둑놈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IMF구제금융 이후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사오정, 오륙도처럼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성과연봉제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과 인사에 차등을 두어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퇴출시킨다.

오로지 경쟁과 퇴출을 위한 도구인 연봉제를 발전현장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와 사측은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연봉제 표준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하며, 무역진흥공사의 연봉제를 모범 안으로 꼽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3차 임금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연봉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연봉제가 노동자 퇴출의 도구라는 것은 사측의 입으로도 폭로되었는데, 지난 6월 동서발전은 “무한 경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

다며 “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미달로 무보직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없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노골적으로 연봉제의 목적은 생존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 개인평가를 비롯한 성과경쟁체제와 연봉제가 도입된다면 발전현장은 외파만 공기업일 뿐 40세가 넘으면 정년이 다가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 되는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현장으로 변하게 된다.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면, 그 다음 수순이 연봉제 도입이다. 발전회사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고 개인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최종 목적은 바로 연봉제 도입에 있다.

사오정, 오륙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전노동자는 정부와 사측의 연봉제 도입 기도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시작으로 다양한 성과경쟁 프로그램 저지 투쟁을 전개하자!

개인별 성과평가, 노동자 줄 세우지 마라! “인사고과, 이동, 성과급 차등, 포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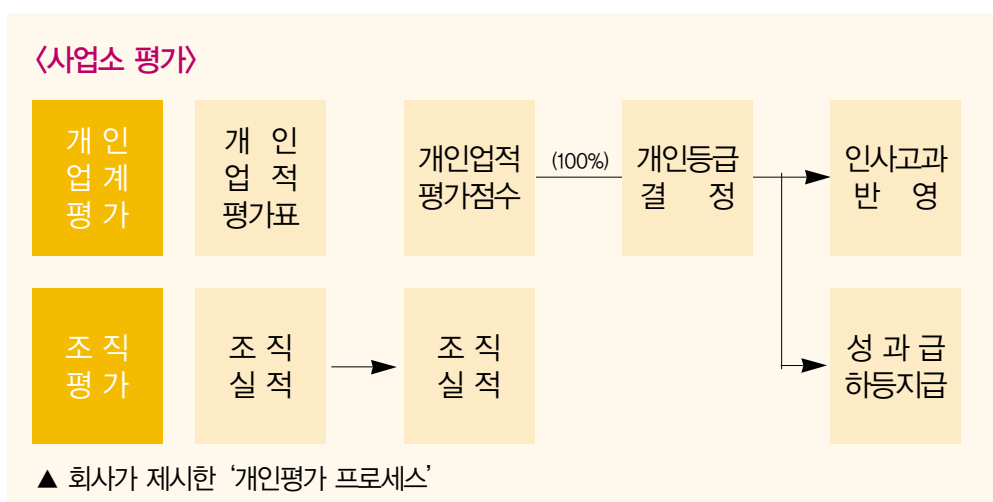
동서발전은 개인별 성과평가 제도개선이 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등급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인사고과, 인사이동, 성과급 차등, 포상 등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노동자 줄 세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MB정부는 지난 4차와 6차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 “실적평가에 따른 내부 성과급 차등폭 확대” 등 경쟁강화를 강조했다. 동서발전 이길구사장은 어느 발전회사 보다 앞장서서 MB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동서발전의 개인성과평가 지표 내용 또한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올 초 회사별로 앞다투어 제시했던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동서발전의 30대 개혁과제 이행 실적을 비롯한 조직인력 효율화, 경영

평가 기여도 등을 개인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BSC와 연계하여 철저하게 개인을 수치화하고 평가해서 인사, 성과급과 연동시켜 직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ERP, BSC, 6시그마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마다 회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업무의 편리성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서발전의 경우처럼 연제는 회사가 맘만 먹으면 개인성과평가를 인사고과, 성과급차등, 이동, 포상과 연계하여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개별 평가하여 줄 세우고, 성과급 깎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개인성과평가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



된다면 같은 직원끼리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동료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발전현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하위로 밀려난 사람에게는 퇴출이 기다릴 것이고, 설사 경쟁에서 상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 회사의 의도는 개인성과평가

를 통해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노동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게 하고, 그 이익은 경영진의 성과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차별과 줄 세우기를 통해 발전현장의 동료애와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개인성과평가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성과급 균등분배로 “함께 살자”



구조조정 많이 할수록 경영평가가 높다?

지난 6월 18일 한전을 포함한 10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작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A,B,C,D,E등급까지 6단계로 등급을 나누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영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S등급을 주지 않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공기업들을 평가하였다. 즉 정부가 흡족할 만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2009년 성과급이 대

폭 삭감되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을 최대한 많이 하고 노동자를 쥐어짤수록 경영평가가 높다. 임금삭감을 많이 할수록, 인원감축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 차등이 높을수록, 개인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도입할수록, 상시적인 퇴출을 할수록 경영평가가 높아진다.

발전회사와 사업소의 경영평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발전회사는 사업소 평가에서 노동생산성과 정부의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즉 현재 경영평가는 오로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스템 성과급 균등분배로 날려버리자

사측은 사업소 경영평가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더욱 밀어 부치고 있고, 사업소 평가를 넘어 개인평가까지 진행하려 하고 있다. 또

성과급 균등분배 어떻게?

조직원들이 차등성과급에 대한 반납 동의서에 서명하면, 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등지급 급여일(9월)에 동의한 모든 조합원의 차등성과급을 모읍니다(CMS 등). 모아진 성과급을 호봉 및 직능등급 대비 동일 비율로 나누어 성과급 균등분배율을 확정합니다. 성과급 균등분배율이 확정되면 각 조합원 마다 반납 성과급 금액과 지급 성과급 금액이 정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세금 보전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반납, 지급 성과급으로 정해져서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철도노조 90.3%, 부산지하철노조 99.58% 참가

철도노조가 09년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90.3%라는 높은 참여율로 마감하였다. 철도노조의 경우 성과급 차등에 대항하고, 연봉제 및 개인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전부터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해 왔다. 올해의 경우 철도노조는 분배받은 성과급에서 조합원 1인당 2만원씩을 떼어 약4억2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1400명에게 1인당 28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2002년부터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2009년의 경우 전체 조합원 2,890명중 12명을 제외한 2,878명이 참여하여 99.58%라는 놀라운 동의율을 기록하였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철도노조, 부산지하

철노조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교조등 많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성과급 균등분배 동의율이 다른 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감축, 임금삭감 이외에도 개인평가 확대 및 성과급 차등지급, 연봉제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개인평가 및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노동자들은 개인평가 확대 및 성과급 차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성과급 균등분배를 전개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들도 허울뿐인 경영평가와 성과경쟁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선택 투쟁하는 집행부



표에서 상대후보를 큰 표자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반면, 지난 임기동안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방기하고 노사평화선언을 했던 현위원장 하원준 후보는 최저표를 얻어 1차에서 낙선했다.

특히 함께 진행된 직능본부장 선거에서 역무본부부를 제외한 기술, 승무, 차량본부

에서 허인 위원장 당선자와 함께 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어 앞으로 도시철도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허인 당선자는 지난 2002년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파업투쟁을 이끈 경험이 있으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이 추진하던 심야지하철연장운행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구)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허 당선자는 이날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밀어닥친 엄청난 해고 압력과 시민 편의를 무시한 성과주의에 시달리고 있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일방적인 강제퇴직 등 인원 감축을 막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통(不通)의 단체협약. 임금교섭

소통을 말하는 시대에 유독 불통이 당연하듯 여겨지는 영역이 있다. 노사관계다. 감사원 감사, 정부의 지침, 사회적 여건! 이러한 말들을 운운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측은 소통을 부르짖는 요즘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

요하고 있다. 대화는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5차 실무교섭까지 이르면서 사측의 형태는 “교섭할 대상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한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니, 법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야간노동할증률을 0.5로

하자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5개 발전회사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통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과연 이번만 임금·단협 양보하면 다음은 괜찮을까? 우리는 불통의 상황을 극복한 사례를 알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민중

의 요구를 주장했던 촛불투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리저리 어렵다하지만 주눅 들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주장을 말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 제 11 조 (조합활동을 위한 근대처리)

노동조합 2. (“정기” 삭제)
5. 조합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경우

회사 ...위하여 조합대표자가 근대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단, 조합은 5일전까지 회사에 근대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연회)·정기중앙위원회(분기회)·정기중앙집행위원회(격월 1회) 참석시
3. 선거관리위원회(임원선거 및 정기대의원대회) 및 회계감사위원회(정기회계감사 및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연회) 참석시
5. 조합규약에 의한 선거입후보자중 중앙임원은 15일, 본부임원은 7일 이내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 2009년 임금교섭

노동조합 •임금인상 : 3.6%+α% •제도개선
•부족인원 충원 및 이사회 원천무효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 철회
•징계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회사 •총인건비 동결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신기술의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자동화, 전산설비(정보화 시스템 등) 등을 도입하거나 작업 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도입의 타당성과 계획단계부터 운영, 고용조건, 노동조건 변화, 노동 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朝三暮四(조삼모사)



얼마전 조합원들이 너무나두 한마디씩 물어왔다. “한전이 임금동결과 정년연장을 타결했다는데,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거냐”, “정년 연장된 시점 이후에는 임금 덜 받아도 정년연장 하는 게 낫지 않냐.”...

한국전력처럼 정년 전부터 임금 깎아서 그걸로 정년연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도 적극 고려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과 인사정책 해소 및 고용안정이라는 기재부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했다. 사실 사기업의 6%, 공공기관은 2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전 3년 동안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평균 28.4%가 깎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제 총인건비는 7% 정도 깎인 거라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하루는 고령화시대 어쩌구 하면서 고령노동자들의 취업증가, 경력자들의 숙련된 생산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음날엔 청년실업과 생산성 어쩌구 하면서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 강제퇴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모순된 것 같지만,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사람, 특히 노동자들이 늙어서도 일직 안 죽으면 국가, 사회가 먹여살리거나 보조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은 재원이 고갈되어가고 불안정해진 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금액도 줄이면서, 저임금으로 일을 더 시키고, 이 기회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경쟁도 강화시키자는 것이 보수언론의 기조다.

임금피크제와 연동시켜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개약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청년실업자들도 인턴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별도 저임금 호봉표를 만들어 채용해서 정규직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냥 온전히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닌, 임금피크

제 도입 혹은 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은 무늬만 정년연장일 뿐이다. 형식적으로는 정년이 연장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임금이 깎이고, 성과경쟁제도와 개인 평가가 강화된다. 결국 ‘능력’ 운운하면서 알아서 일직 나가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기만적인 음모다.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 하면서 임금을 깎는 의도가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 라면 그만큼 풍요롭고 즐겁게 살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년연장에 혹해서 어느 정도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환상을 넣어서! 임금피크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저항의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을 모색한다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소비 증가와 석유생산국의 지정학적 위험 증대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요인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될 구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대체 관계에 있던 다른 에너지시장 또한 직접적 충격을 받아, 천연가스 특히 LNG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유엔탄의 경우도 생산국의 생산 차질, 중국 등의 내수증가로 인한 석탄수출 금지 등 공급의 불안정성과 공급 물량 부족 현상으로 가격 급등 추세를 보였다. 또한 수요자중심 시장이 메이저 위주의 공급자중심 시장으로 바뀔에 따라 수요자의 물량규모에 의한 구매협상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분할 이후의 상황과 구매경쟁으로 인해 연료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정대위신문 5호(2009.7.2) 전기요금개편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언급했듯, 사유화(민영화), 시장화에 대한 과거 발전노동자들의 우려가 현 상황에도 들어맞고 있음이 명확하다.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들의 대변자인 정권에 의한 교육·의료·전기·물·가스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사유화·시장화에 맞서고, 변화하는 논쟁의 핵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자 발전노조는『발전 분할의 문제점과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거의 연구를 통해 당시의 문제인식과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는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발전 원가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세계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에너지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급안정성, 시장 효율성, 환경친화성 중 공급안정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공급국의 위상과 협상력 강화에 대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의 전략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서비소로서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의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발전연료의 97%를 수입하는데...

21세기 들어 원유를 비롯한 세계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인도와 같은

2002년과 2006년의 연구보고서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다. 이러한 주장은 2008

년 극적으로 현실화 되었다. 한 해 동안 월단위 유엔탄 도입가격의 경우 3배, 심지어 원자력조차 도입가격이 2배 정도 변동했다. 그동안 내부적인 노력들로 발전연료 인상을 완충해오던 발전회사는 분할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와중에 한전 김쌍수사장은 연료공동구매, 구매분야 통합 등 가당치 않은 주장을 펼치며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발전분할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말하고 있으며, 대안은 분할된 발전회사를 다시 한전으로 수직재통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나 보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정권이든, 자본이든, 한 개인이든 역사와 민중의 죄인이 될 뿐이다.

세계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인데...

1989년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현재 60여개국에서 효율성 상상을 위한 경쟁 확대를 골자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형태와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형태에 있어 영국, 호주,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분할, 사유화를 통한 급진적 방법을 선택했던 나라가 있는 반면 프랑스, 일본과 같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거나 산업을 분할하지 않고 통합적이고 부분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국가 또한 적지 않다. 성과 부분에서도 에너지원의 보유 여부, 전원믹스, 규제구조 등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중(輕重)은 있지만 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떠한 형태이건 존재하고 있다. 공급 불안정, 장기적인 공급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독과점 재발생, 경쟁에 의한 효율성 효과의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개편의 중지, 중단 및 재통합의 움직임과

통합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상은 2006년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글이다. 2008년 서울대학교연구소에서 발간한『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용역(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해 보겠다.

결과적으로 발전부문의 분할은 ‘국제 에너지패권주의’라는 시대의 조류를 극복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며, 특히 국제 발전연료시장의 불안정은 국내 발전부분의 발전운전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 진전이 없는 담보 상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반면에...

이러한 결론들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옹호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구조개편이 실패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하고, 완전한 구조개편과 더욱 철저한 시장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발전분할,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원상회복과 수직통합이며, 이는 발전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시장주의자들에 맞서 올바른 전력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지금부터의 싸움은 더욱 중요하다.

정책기획실

다음 호에는 우리에게 보다 가까운 주제인 ‘발전회사 분할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전력거래시장 실패(CP요금, 교차보조 외)』를 다룰 예정입니다.

통합적 전력산업 연구프로젝트 진행

제9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발전분할의 문제점과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이하 ‘통합적 전력산업 연구프로젝트’라 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실패한 구조개편, 실패한 민영화 정책, 발전 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정부의 선진화,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설비증설에 따른 인력충원 및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

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조승수 의원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국민 여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30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발전분할 이후의 설비운영,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연료 구매분야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향후 연구진은 발전소 현장 방문,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4월 14일	제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협력실 사업계획으로 제출 및 승인
	•5월 20일	전력산업 프로젝트 연구진 섭외
	•6월 02일	전력산업 프로젝트 연구계획서 협의(초등 모임)
	•6월 12일	연구프로젝트 기본계획서 품의 확정(노조 내부)
	•6월 23일	1차 연구진 회의 및 계약 체결(사회공공연구소) - 연구진별 연구계획서 제출
	•7월 16일	2차 연구진 회의(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연구진 연구계획서 및 향후 연구방향 토론회 수정
과	•7월 30일	3차 연구진 회의(발전노조) - 발전회사 실무자 간담회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연료구매분야)



철도/발전/가스가 함께 싸운다

공기업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는 MB정권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철도, 가스, 발전노조가 하반기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내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는 세 노조는 지난 5월 15일 간부합동수련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실무논의를 통해 공동투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8월 11일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과 가스노조 황재도 위원장의 공동투쟁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들어보자.

철도/발전/가스의 공동투쟁만이 함께 사는 길

낙하산 사장 취임 이래 철도현장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결했던 합의들이 파기 되었으며 공사의 일방적인 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 되던 복지 제도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있으며, 해고자 복지에 대한 기존합의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용절감을 이유로 5,115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부실령어리 대국민사기극인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는 여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민주철도노조 정취 이후 2002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발전노조 동지들과 솔한 어려움을 투쟁으로 함께 해 왔지만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정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철도노동자와 발전노동자가 수많은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을 기반으로 정취한 모든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철

도노동자는 현재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행의 씨앗은 이명박 정부가 아십차게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 다름 아닌 정책, 발전과 철도를 비롯해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적기업의 상업화, 사유화에 다름 아닌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차 본교섭과 106차례에 걸친 분야별 실무교섭이 이뤄졌지만 교섭안건 170여개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80여개의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일치를 보았을 뿐 90여개에 이르는 안건은 공사측의 개악안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이와 같은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사관계의 파탄을 가져오는 독선적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지난 6월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한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 한바 있습니다. 최근 철도공사의 태도나 교섭진행과정을 봤을 때

하반기 투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7월 15일 철도노조는 확대정대위를 통해 2006년 3월 1일 파업에 대해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 및 조합비납류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채권 발행과 현장으로부터 하반기 투쟁을 선도할 실천단 구성을 결정하며 차분하지만 세밀하게 그리고 공세적으로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지난 2002년 2.25총파업의 힘과 기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을 또한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이미 철도 선진화, 발전 선진화, 가스 선진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교섭도 해보고 투쟁도 해 봤지만 개별 단위노조의 대응만으로는 이제 그 한계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서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대투쟁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힘을 냅시다. 철도 노동자들도 하반기 발전, 가스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투쟁

철도노조 위원장 김기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공공노조 가스지부는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한 우리에게서는 자본의 사유화에 맞서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가스산업의 사유화법인 가스산업 선진화법을 입법 예고 하였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처리중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공공재인 도시가스는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요금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에너지공기업을 이용하여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원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들을 자본에 넘겨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5개사를 비롯한 한전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그리고 세계적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기업들을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대상으로 삼아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알뜰한 술수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가스지부는 MB 정권 취임 이후 150여

가스노조 위원장 황재도

5%가 국민의 눈과 입을 장악하다



송 제기한다고, 경찰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국가가 독식한 마당에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과연 불발으로 판결날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렇게 누락,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치기 법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과 언론의 합동프로젝트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최근 국회 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속기록에는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 당시의 핵심 내용들이 송두리째 빠져있었다. 당시 방송법 투표 종료 직후 의결 정족수가 미달 표시된 전광판 표결 상황이나, 야당 의원들이 부결외치는 모습이나 재투표 재촉하는 소리 등, 한나라당에 불리한 내용들이 누락되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마저 다 빠진 것이다. 증거 조작의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프랑스나 미국처럼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획득된 것도 아니고 노동자와 서민을 배제한 채 엘리트들끼리 장단 맞춰 만들어진 나라다. 그렇기에 헌법도 아닌 국회법을 헌법재판소에 소

해서 결영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조종동이 지상파를 장악하고, 지상파가 아니어도 지상파 채널 간에 황금 채널을 장악해서 MB방송뉴스만 틀어대면 국민들은 다른 뉴스를 선택할 수도 없다.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TV에는 문체부와 방통위, 지경부 등이 미디어 관련법을 미화시키는 공익광고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이 독점자본의 지배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법제도 개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민의 62%가 날치기 방송법 개악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미 55% 이상이 조중동과 방송법의 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간파했다. 언론노조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지난 두차례 파업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을 했고, KBS도 참여했다.

국민여론이 언론노조의 투쟁을 지지했듯이, 노동자와 민중이 바라는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노동자와 국민에 편에 선 진정한 사회적언론을 만들어가는 투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법을 개악한 이후, 교육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민심을 돌리는데 급급해 있다. 하지만 99개 빼앗고 1개 주며

생색낸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할 뿐이다. 노동자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자본,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

7월 22일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의 언론관계법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상업성을 더 강화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사, 통신사 등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 지상파 방송은 지분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이들 회사에 진입을 허용(외국인 20%)했다.

○ 사전규제로 신문사의 구독률이 20%를 넘을 경우 지상파방송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신문사는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공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안이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의 구독률이 각각 11%, 9%, 8%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법개악은 대기업과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로도 미디어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장을 지키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 파업투쟁이 일단락됐다. 노조가 52%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회생의 길이 열렸다고, 많은 곳에서 환영했다. 정권은 파업이 종료되자마자 100여명의 연행과 40명이 넘는 구속으로 ‘선처’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동안 회사의 노사협조주의적인 당근과 회유 속에서 살아왔다.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비록 성숙하지 못했고, 공장 옆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봐도 자신이 해당되지 않음에 안도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 이기주의, 노동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사본으로 넘어간지 몇 년 되지 않아 생산직의 절반에 해당되는 대대적 정리해고의 공격을 받았다. 회사의 협박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치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주저없이 투쟁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실제 투쟁이 시작된 후 쌍용차의 정규직, 희망퇴직자, 하청업체 관리자, 조합원의 가족 등 7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고는 살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와 입장은 그야말로 도를 넘어섰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때조차, 자율 해결이란 이름으로 수습관했다. 오히려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하고,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작업복을 입혀서 거대한 새총으로 공격하고 각목으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를 때에 경찰은 오히려 이를 비호했다. 게다가 테러진압용 태이저건을 노동자들의 얼굴과 몸에 마구 쏘아대고 헬기를 동원해서 최루액을 퍼붓고 특공대를 투입해서 잡아죽일 듯이 했다. 공권력은 그야말로 공안된 강패였다.

이 나라는 이런 반인륜적 행태를 당해도 이를 알리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나라다. 나의 권리, 빼앗긴 걸 되찾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국가인 권위도 MB에 완전히 장악되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나라다. 용산 철거민들의 참사가 이미 반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이 투쟁했다고 구속되고 시신이 냉동고에 갇히는 나라다. 택배 노동자가 탄압 당해 억울함과 투쟁을 호소하며 죽어도 회사는 노사화합 칭찬 받는 나라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스프렌들리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온건할 것인가. 노동자를 우습게 아는 자본은 오래 갈 수 없다. 자본만을 비호하며 노동자를 죽이는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정권이 아니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하반기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모아 이명박 정권과 한판 붙자!